

도,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 위한 R&D 지원

첨단재생의료·바이오융합 분야 과제 당 최대 1억6천만원 지원
내달 6~18일 온라인 접수... 전북과학기술정보시스템 통해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와 바이오융합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첨단재생바이오 및 바이오융합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도내 바이오기업의 기술 자립을 지원하고,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총 5개 과제에 약 4억

5,000만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원 분야는 △첨단재생바이오 R&D(오가노이드, 세포·유전자 치료제, 소재·부품·장비 등)와 △바이오융합 R&D(건강기능성식품, 의료가기, 펩트 등)로 구분되며, 과제당 최대 1억6,000만원(재생바이오), 1억2,000만원(융합바이오)의 도비가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연구기관, 대학, 출연연 등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전북도 내 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연구소기업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주시·익산시·정읍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도의 기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는 2025년 8월 6일부터 8월 18일 오후 4시까지 전북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mdi.j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원식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R&D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첨단바이오 분야 기업들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역량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자치도가 첨단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정과제 반영을”

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5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대통령 공약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북이 보유한 독보적인 연금 기반 자산운용 생태계와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울·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전북을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은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 이전을 계기로, 연금 중심의 자산운용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이 과정에서 16개 금융기관 유치, 제2 사옥 건립, 연간 340명



규모의 금융 전문인력 양성 체계, 핀테크 육성,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 현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이행계획은 여전히 지연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법 개정 없이 추진한 반면,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공약 무시, 기금운용본부 재이전설 등으로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은 이미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 스마트팜 현장서 농가소득 향상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스마트팜 현장을 찾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 25일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케어팜에서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제2기 농업소득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6년 신규 시책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기존의 회의실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농업 현장을 방문해 정책 효과와 현장의 의견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3,300㎡ 규모의 스마트팜을 운영 중인 케어팜을 둘러보고, 감초와 도라지 등 약용작물 재배 현황과 이를 활용한 식품·화장품 생산 과정을 살펴봤다.

케어팜은 청년농업인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융복합 모델로

농업소득분과 제3차 회의 개최... 2026년 신규 시책 집중 논의
청년농 육성·융복합 모델 '케어팜' 방문... 현장 중심 정책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케어팜에서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제2기 농업소득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6년 신규 시책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평가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실질적 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농업소득분과는 올해 제2기 출범 이후 못난이 농산물 유통, 자연재해 대비 시설하우스 보강 등 현장 밀착형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026년 적용 가능한 신규 시책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가 자체 발굴해 추진 중인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시험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도 우수사례로 공유됐다.

'저탄소 인증 시험사업'은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가에 인증을 부여하고 유통·판매로 연계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전북에서 도입됐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과일을 초등 돌봄교실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어린이 건강 증진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만호 기자

“농업 팔아넘기는 굴욕적 협상 중단하라”

도의회, 이정린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제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축산업을 희생양 삼는 한·미 통상 협상 전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 한우, 사과 등 국민 식탁과 직결된 주요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농축산업을 협상 테이블 위 흥정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전략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에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응답하듯 농산물 분야의 '전략적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기반이며 국민 생존권을 지탱하는 생명 산



업이다”며, “정부가 이를 외교 협상의 거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과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북자치도는 전국 쌀 생산량의 15.2%, 한우 사육두수의 12%, 사과 출하량 기준 전국 4위에 해당하는 농업의 핵심지역”이라며, “이번 협상은 전북자치도 농업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처사이며, 도민의 삶을 협상의 제물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95억 달러에 달했지만, 대미 수출은 15억 달러 수준에 그쳐 8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런 일방적 수입 구조 속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논의하는 것은 정부가 자국 농업을 스스로 무너뜨리겠다는 자해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농축산업을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삼는 한·미 통상 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식량주권 수호라는 헌법적 의무를 명확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린 의원은 “정부는 통상 협력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국민의 먹거리와 농업의 미래를 흥정 대상으로 삼지 말고, 농축산업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국민 앞에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진안에 80km 명품 숲길 생긴다... 산악트레킹 코스 조성 '속도'

진안군에 자연과 어우러진 명품 산악트레킹 코스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도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진안군 자연친화적 산악트레킹 코스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0억 원(도·군비 각 20억 원)을 투입해, 진안 전역에 걸쳐 총 4개 구간 약 80km 규모의 산악트레킹 코스를 조성하는 것이다. 구간은 △구봉산 △대덕산~천반산 △부귀 편백숲 둘레길 △선각산~덕태산 등으로 구성된다.

구봉산 - 부귀 편백숲 잇는 트레킹코스 조성사업 순항 중
내년 4개 구간 연결... 산림·관광 연계로 지역경제 활력 기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구봉산~북두봉(6.6km), 북두봉~운일암반일암(8.54km) 등 총 15.14km 구간이 먼저 조성됐다. 이 구간에는 목계단과 안전로프, 방향표지판, 안내판 등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이 갖춰졌으며, 산행의 쾌적함을 더하고 있다.

이어 올해 6월에는 대덕산~천반산 구간(총 23.7km) 공사가 착공돼, 오는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본격 추진 중이다. 이후 2026년에는 부귀편백숲 둘레길과 선각산~덕태산 구간이 차례로 완공되면서 전체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미 조성된 구봉산 트레킹 코스는 용담댐 조망을 비롯해 험준한 암릉과 부드러운 휴일이 어우러진 변화무쌍한 지형을 따라 걸을 수 있어, 산행의 즐거움과 함께 자연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도는 이번 트레킹 코스 개발을 통해 특색 있는 숲길을 구현함으로써, 만족도 높은 산악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진안 고원길, 국립지리원산립치유원,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해 관광 시너지 극대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지난 25일 신라스테이 전주에서 HR협의회 참여기관 워크숍이 열린 가운데,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자리 연결, 협력으로 답하다

전북지역 HR참여기관 네트워킹 워크숍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지난 25일 신라스테이 전주에서 HR협의회 참여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 세대의 인식, 가치관, 취업 고민 등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즘 청년 마음 사용설명서'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고, 참여자들의 일·생활균형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걷기와 치유힐링' 시간도 가졌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기관별 간의 유기적인 협업 우수사례 및 전북지역 일자리 동향을 공유했다.

전정희 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각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내 취업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거버넌스를 다지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북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및 유관기관 간 상생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지역 HR협의회는 전북여성가족재단(전북여성새일센터)이 주축이 돼 2015년부터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법무부, 신대경 신임 전주지검장 임명

검사장급 인사 단행... 전임 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법무부는 지난 25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신대경 법무부 송무심의관(50)을 제73대 전주지검장임명 검사장에 임명했다.

신임 신 지검장은 경북 의성 출신이다. 대구 경북대부설고,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UC 데이비스 로스쿨에서 방문학자 과정을 마쳤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32기) 수료 후 200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하며 공직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대구지검, 서울남부지검, 울산지검, 춘천지검 원주지청,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전국 각지의 검찰청을 두루 거치며 민생 사건과 공판, 송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헌법재판소와 국무조정실에도 파견돼, 검찰 외부의 법조 환경과 정책 업무에 대한 이해도 갖췄다.

특히 법무부 국가송무과 검사와 송무심의관을 역임하면서 국가를 대표해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로서 묵묵히 책무를 다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합리적이면서도 신중한 판단력, 그리고 조직과 국민을 함께 아우르는 균형 감각을 지닌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인사는 전국 검사장급 검사 33명 중 15명에 대한 보직 변경과 신 지검장을 포함한 18명이 검사장으로 새롭게 임명됐다.

한편, 박영진 전임 전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은(전주6)이 발의한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안전



취약계층의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대피방안 마련 △생활안전환경 개선사업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생활밀착형 홍보·교육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데 있다.

/이만호 기자

2025년산 맥류 정부보급중 신청 접수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이 2025년산 맥류(보리·호밀) 정부보급중(이하 보급중) 신청을 안내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포함)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8월 20일까지 받는다.

신청·공급 품종은 큰알1호(56톤), 흰찰쌀(36톤), 누리찰쌀(224톤), 곡우호밀(3.4톤)이다.

큰알1호와 흰찰쌀보리의 경우 전량 소득, 곡우 호밀은 전량 미소득 종자로만 신청을 하여야하고, 누리찰쌀의 경우는 8월 5일까지 소득 종자만 신청하되, 8월 6일부터 20일까지는 미소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보급종은 출고 이후 신청 내역(품종, 수량 등)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농가에서 변경 및 취소가 필요한 경우 출고 이전에 접수기관 또는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종자 구입 확인서는 신청한 농가명의로만 발급되므로 대리신청 시 발급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농업인 본인 이름으로 신청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종자원(1533-8482) 또는 국립종자원 전북지원(063-530-3620),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